

데스크 시각

선거구 획정에 유권자는 없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얼마 전 광주일보 독자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의 말씀이 가슴에 남는다. 신문사의 독자위원회는 읍부즈맨 제도의 일종으로 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통해 지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는 자리다. 이 위원은 정치 분야 지면에 대한 평가를 하던 중 지방 의원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가끔씩 지방 의원들이 정말 필요한 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였다.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는 드물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좀 지나치다 싶기도 하지만 일면 공감가는 지적이다. 내년 6·13 지방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광역 의원과 기초 의원의 지역구와 의원 수를 정하는 문제이니만큼 정치인들이 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인 논리만 반영

선거는 후보자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물이 자신과 맞지 않게 조정되면 뜻을 이룰 수 없는 구조다. 선거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진다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수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다 자신이 공들인 선거구가 인근 지역구에 통합되는 바람에 뜻을 접은 한 정치인은 당시 “인생이 ‘윤칠 기삼’(윤이 7할, 노력이 3할)인 줄 알았는데 ‘윤구 기일’(윤이 9할, 노력이 1할)이더라”며 탄식했던 기억이 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광역 의원의 선거구와 의원 정수 및 기초 의원의 정수를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광역 시도는 기초 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행안부안이 최종 결정되면 전남에서는 최악의 경우 도의원이 6명 줄고,

광주는 동구 시의원 1명이 광산구로 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계특위는 광주·전남 시도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기준을 4대1로 정해 상한선(12만3580명)과 하한선(3만896명)을 두고, 상한선을 넘기면 쪼개고 밑부분 통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광주는 동구에서 시의원 1명을 줄여 상한을 넘긴 광산구에 주게 된다. 전남은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성에서 1명씩 6명을 줄이는 방안과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한 순천에 1명을 늘리는 대신 함평에서 1명을 줄이는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 비율 더 높여야

기초 의원은 의원 정수 산정을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이 쟁점이 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모두 기초 의원 수는 4년 전 지방선거와 변함이 없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조로 할 것인지 행정구역(읍면동)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조로 읍면동 비율이 30대 70인 지역은 광주·전남·충북·전북 등 네 곳에 불과하다. 서울은 100% 인구 비율로 기초 의원 선거구를 정하고 있고 인천과 세종은 70대 30, 대

구·대전·경남은 60대 40이다. 50대 50인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 시·도도 표의 등가성을 반영해 인구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남은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당초 인구 비율을 10% 늘려 40%로 방향을 잡았다가 의원 수가 줄게 되는 지자체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원안대로 결정했다. 인구 비율을 10% 늘릴 경우 농어촌 지역인 담양·고흥·화순 등지에서 일곱 명이 줄어들고 줄어든 수만급 도시 지역인 여수·순천·목포는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라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결정이지만 아쉬움을 남겼다. 이제 광주시 차례다. 광주시는 기초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와 동 수 비율을 현재 30대 70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회 정계특위 결정과 타 시도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분위기다. 광주는 전남과 달리 행정구역에 따른 인구 밀도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과감하게 인구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공청회 등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시스템을 지급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ungy@kwangju.co.kr

은편칼럼

중국과 외교 협력을 증진시키자



임명재 약사

박근혜 정권 말기에 기습적으로 배치한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아직까지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얼마 전에 중국으로 국빈 초청을 받아 시진핑 주석의 옆에 서서 중국 군대의 사열을 받고 극진히 대접받는 모습을 지켜봤었다. 미국과의 오랜 우방 관계에 따른 국방과 경제적 긴밀함에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미국의 그것에 필적할 만한 관계에 이르렀었기에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상은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상기시켜준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을 보면 대중국 수출액이 약 144조 원인 반면 미

국에 대한 수출은 약 77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 대한 비중에서 중국은 25%를 차지하였고 미국은 13.5%였다. 이것을 다시 무역 흑자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약 43조원의 이익을 얻었고 미국으로부터는 약 27조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나 면적이 국내 소비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출에 전력을 다해야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북한 핵에 대응하는 우리와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꾀꾀도 하지 않았고 최근에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노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게 은밀한 생존 물자를 공급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이 사라지게 되면 대한민국과 국경을 맞대야 하고 그 뒤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에 대한 방파제가 되고 있는 북한을 유지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

문이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외교의 한계가 있음을 백만 인정하더라도 그토록 극진한 대접을 받고 온 얼마지 않아 기습적으로 그것도 정권의 말기에 심지어 탄핵에 이를 지경으로 통치력이 약화된 시점에 개성공단에 이어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열렬한 구애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꼴이었다. 18조 원 사드 배치 이후에 발생한 대 중국 무역 손실과 그에 따른 고용 손실의 추산액이다. 굳이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육로로 중국의 엄청난 제품들을 중동과 유럽에 공급하려고 한다. 우리는 실리 외교를 해야한다. 무조건 미국이나 일본의 편에서 동북아정세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안된다. 미국 중심의 외교에 대한 명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과의 실리 외교는 동북아 평화 정착이라는 대의 명분에 부합하는 측면도 매우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출대를 당했다. 무시 받아서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 당했다. 중국에서 얻어온 것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토록 급박하게 일정을 수립해서 사전에 다양한 정상급

외교의 약속도 받지 못했음에도 중국을 방문해야 했던 속사정에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최소한의 송동을 터주고 하는 눈물겨운 배려가 있었음을 살펴보면 한다. 그동안 잘 만들어왔던 한류의 열풍을 다시금 살려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죽어있는 개성공단에도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 인조는 명과의 의리를 명보다라 고집하다가 후궁에서 청으로 국호를 바꾼 신진 세력에 대항하다가 조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지구의 자연환경처럼 국제 질서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생물들도 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진화해온 것들만 살아남았고 국가나 민족 또한 마찬가지다. 북한 핵과 관련된 어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지만 우리의 삶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평화를 위해 중국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증진시키고 경제력을 확보하는데도 중국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우리의 의식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기고

‘창조적 분노’와 ‘참여’



류재한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노의 시대이다. 폭력과 불의, 극단주의로 점철된 세상 속 인간은 개인적 분노를 넘어 사회적 분노의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2015년 프랑스에서 인간 존엄성의 무시와 훼손을 넘어 문화와 문명의 퇴보를 가져왔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1월 7일의 극단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한 ‘샤를리에 브드 테러’와 ‘11월 13일의 파리 테러’로 인간이 왜 분노해야만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특히 후자는 파리 시내 식당과 카페, 공연장 등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고한 시민 13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극단주의와 테러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점점 더 달했던 사건이었

다. 시민의 일상적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IS의 테러는 정신적 공황과 더불어 극단적인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테러에 맞서 터져 나온 프랑스인들의 분노는 개인적 감성 차원의 분노가 아니라 테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의 사회적 분노였다. 테러와 극단주의에 맞선 그들의 분노는 외면과 회피, 체념과 무관심의 ‘파괴적 분노’가 아니었다. 그들은 분노를 은폐하지도 않았다. 분노의 은폐역시 파괴적 분노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분노할 실마리를 잡아서 분노할 줄 알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저항할 줄 알되, 마음속에는 비폭력의 심지를 굳게 세우고 참여하여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는 분노였다. 이처럼 ‘창조적 분노’는 파괴 저항의 가능성이 높은 분노를 공동체의 단합이나 연대의 촉매가 되는 ‘창조적’으로 활용된 분노를 말한다. 11월 13일의 파리 테러 발생 2주 후 숨진 희생자 130명을 위한 추도식이 군사박물관 옹발리드에서 거행되었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의 추도식 연설은 분노가

보복과 응징 행위의 동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테러에 대한 대응의 방식으로서 ‘일상의 회복’을 외친다. 파괴와 죽음을 추양하는 테러리즘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에 굴복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더 많은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장과 경기장에 가는 ‘일상의 회복’은 사회적 분노의 창조적 승화 즉 ‘창조적 분노’에 다름 아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 프랑스 시민들이 콘서트장과 경기장을 찾는 행위와 같은 ‘공동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는 창조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프랑스인들은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에 ‘분노할 수 있는 힘’을 응집하고 ‘그 결과인 참여’로 테러와 극단주의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분노와 저항이 무관심이나 증오, 복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위한 ‘참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창조적 분노는 비폭력으로 다수가 함께 하는 ‘참여’로 승화된 분노를 말한다. 어떠한 두려움과 증오에도 굴종하지 않고 일상의 회복을 이루게 하는 ‘창조적 분

노’의 원천인 ‘참여’는 ‘형제애’와 ‘솔리다리테’(연대)의 발취로 구체화된다.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인들은 머무를 곳도 없는 생면부지의 외지인들을 위해 자신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집주소와 함께 ‘열린문’(you are welcome in my house. #PorteOuverte)을 제공하고 부상자 치료를 위해 헌혈에 적극 나서는 ‘도덕적 의무’를 발휘한다. 이러한 도덕적 의무의 발휘는 바로 일상의 회복을 위한 비폭력의 ‘참여’이다. 그리고 그 참여는 ‘형제애’와 ‘솔리다리테’의 표현이며 ‘창조적 분노’의 구현의 방식이다. 테러 이후 거리로 나선 파리 사람들의 ‘Je suis Paris’(나는 파리다)라는 당당한 외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테러 현장과 추모의 공간에서 프랑스인들이 밝힌 촛불 역시 분노로서 ‘참여’, 즉 ‘형제애’와 ‘솔리다리테’의 표현 방식이다. 그리고 테러와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폭력적 응징이 아닌 일상의 회복을 위한 비폭력의 참여, 즉 ‘형제애’와 ‘솔리다리테’라고 하는 창조적 분노로 이 끌고 있는 감성적 연대의 주체는 바로 ‘일반 시민’임을 알아야 한다.

社說

달빛 철도 조기 건설로 남부경제권 살려야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광주~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영호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권과 영남권의 중추 도시를 연결하는 횡단 철도를 새로 만들어 남부경제권을 육성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대구시,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고령군 등 달빛 내륙철도가 경유할 영호남 야합 개 자치단체는 그제 국회에서 포럼을 열고 사업의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와 대구를 한 시간 생활권으로 이어줄 이 철도는 지난 1999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장기 과제로 포함됐으나 무산됐고, 지난 2011년과 지난해에는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됐다. 이날 포럼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박사는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대량 화물 운송으로 교통과 물류를 활성화해 남부경제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축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 또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박사는 “이 철도는 20년째 말 그대로 ‘추진 중’인데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권과 지역의 무관심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선 6기 들어 광주와 대구가 상상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양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유일하다. 철도망의 경우 대전(경부선) 등을 우회해야만 해서 시간 30분이나 걸린다. 영호남 교류를 산업 분야까지 연결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주~대구를 곧장 잇는 새로운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해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확보와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 급선무다. 이를 지지하는 달빛 내륙철도는 실현하는 것은 역부족인 만큼 양 지역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살벌해지는 주차 전쟁 근본 대책 필요하다

주택가나 아파트 등은 물론 유흥지구 등 도심 전체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엔 행사가 많은 연말을 맞아 눈도 자주 내리는 바람에 주차 문제로 곳곳에서 말다툼이나 심지어 주먹다짐까지 벌어지는 등 살벌한 풍경마저 연출된다. 주차난은 이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때다.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64만 6936대로 1가구당 1.1대, 운전면허 소지자 두 명당 한 대꼴이다. 하지만 차량 수가 매년 3%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다. 주차난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필요한 만큼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광주의 주차면 수는 72만 면으로 등록 차량 대비 114%이다. 서울 129%, 울산 115%를 제외하면 대도시 가운데 주차 공간이 가장 넓은 셈이다. 그러나 차량이 은종일 주차돼 있다면 몰라도,

운행을 수시로 하는 데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차량도 집중되는 탓에 대도시 일수록 주차난이 심하다. 특히 광주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경우 주차 1개 면당 5000~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설사 예산이 있어도 땅 구하기는 더욱 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주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주차 문제는 주거 생활에 있어 삶의 질과 사회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이나 상인들이 협의를 통해 도로 한쪽만을 주차면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주민들이 주택이나 아파트 정문·담장을 얽어 주차장을 조성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조선 숙종 재위 23년인 1697년,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작센 공국의 한 젊은 제후가 왕위에 오른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투스 2세(1670~1733)이다. 그는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1694년에 신성로마제국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제후(選帝侯) 자리’를 이어받았다. 드레스덴을 주도(州都)로 한 당시 작센 공국은 신성로마제국을 구성하는 많은 영방(領邦) 중 하나였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지만 황제가 통치하는 신성로마제국 내에 서는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그는 ‘선제후’ 자리에 앉은 지 불과 3년 만에 뜻을 이룬다. 작센 공국과 인접한 폴란드 왕으로 선출된 것이다. 그는 ‘태양왕’으로 불리는 프랑스 루이 14세를 동경했다. 덴마크 국왕을 초청해 연 축제에서 태양 형상을 한 가면을 착용하기도 했다.

그는 군주의 위엄과 권위를 보이기 위해 진귀한 예술품을 수집했다. 상아와 금, 은, 청동, 다이아몬드, 진주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만든 세공품이였다. 특히 그가 관심을 가지고 수집한 것은 ‘하얀 금’으로 불릴 정도로 귀하고 값비싼 일본과 중국의 자기였다. 그는

왕과 보물

중심지로 자리 잡은 데는 예술품 수집과 도자기 산업을 일으킨 그의 공이 있었다. ‘강건왕’(Augustus the Strong)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아우구스투스 왕이 수집했던 바로크 시대 예술품 1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국립 광주박물관과 독일 드레스덴박물관 연합이 함께 개최하는 ‘왕이 사랑한 보물 전’(12월 19일~2018년 4월 8일)이다. 바로크(Baro-

rocco)는 ‘불규칙한 형태의 진주’를 뜻하는 포르투갈어이다. 진주로 만든 ‘두 무어인고 낙타’라는 작품도 찾아보면 서 독일 바로크 예술을 만끽해 보시길. /송기동 예방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경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